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12/21 통권 1602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100세, 헨리 카신저의 고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미래현금흐림 평가방법
(DCF : Discounted Cash Flow)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착각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관련 주요 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13일 지급
-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 외부감사인 선임·지정제도 및 지정감사 업무수행 관련 유의사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국내업체로부터 광고영상물을 공급받아 외국광고주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공급시 영세율 적용대상임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과세 명의환원시의 세금문제〉

- 기본원칙(상속 · 증여세법 제45조의2) : 등기 · 등록필요재산(주로 주식임)은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 · 등록한 날에,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 증여제과세제외
 - ①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등기, 명의환원되지 않은 경우 등(예를 들어 배당없는 기업주식 등)
 - ②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자본시장, 금융투자법상 신탁운용자산)
 - ③ 비거주자의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 · 등록 등
- 명의신탁은 불법으로 증여세가 아니고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 토지 · 건물 등(부동산실명법), 예금(금융실명법 등)
- 과거 명의신탁된 기업주식의 명의환원시 문제점들
 - ① 당사자의 실질소유권 주장 :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주주권 · 배당권 행사 등
 - ② 명의신탁의 분명한 입증 : 명의자의 연령(미성년), 소득(없음), 관계(일반직원 등)가 분명하고, 그동안 배당지급이나 소득처분이 없었던 경우 조세회피가 없어 명의환원을 사실대로 인정
 - ③ 입증안되면 해당 주식의 양도 · 양수계약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중소기업 10%, 비중소기업 20%)
- 명의신탁주식의 환원과 문제점 해소 방법 등
 - ① 명의신탁계약해지와 실질명의자에게 조건없이 반환
 - ② 회사가 명의주식을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 후 소각함
 - ③ 실제 소유자가 해당 명의의 주식을 취득하고 대가지급 및 양도세 납부 등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02호 / 주간 51호

2022. 12. 21. (수)

· 발 행 인 : 이 윤 연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과세 명의환원시의 세금문제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미래현금흐림 평가방법 (DCF : Discounted Cash Flow)	2
C E O 에 세 이	윤리경영 앞서 투명경영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소모품 부가세 공제 여부 - 영세울건과 일반매입건 혼재시 부가가치세 신고 - 회원권 평가 시 시세반영 여부 - 법인 종부세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착각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관련 주요 내용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시, 대기업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변화 - 카드사별 국제·지방세 납부 혜택 이벤트	9 10
직 장 인 Survival	성공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12가지 특징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정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8156의24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재산-6393, 2022.05.25) - 사업자가 외국광고주와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광고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를 통해 광고물을 제작받아 광고영상물을 공급함에 있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3705, 2022.05.25)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국세청, 고액채납자 6940명 명단공개... 체납세금 4조4천억	14
마케팅 Tax consulting	국내업체로부터 광고영상물을 공급받아 외국광고주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공급시 영세율 적용대상임	13
세 무 정 보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13일 지급 -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15 23 33
회 계 정 보	- 외부감사인 선임·지정제도 및 지정감사 업무수행 관련 유의사항	35
노 무 정 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46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

미래현금할인 평가방법 (DCF : Discounted Cash Flow)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1. 평가방법

: 절대가치평가법(DCF법), 상대가치평가법(동종 업종의 기존기업가치와 비교)

2. DCF의 개념 정의

: 미래 각년도에 창출될 실제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평균이자율로 할인된 연도별 금액을 모두 더한 가격, 즉 NPV(Net Present Value)를 계산함.

3. 계산절차와 요점

- ① 향후 5년간의 연간매출과 영업이익, 세후이익을 정확히 추정계산함
- ② 여기에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 없는 금액을 더해 실제 현금이익을 계산함
- ③ 또한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매입채무의 순증감을 합산함
- ④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r로 표기함)을 구하여 5년간의 현금흐름액을 할인계산함
- ⑤ 5년간의 순현금흐름 현재가치 + 5년말의 잔존누적현금흐름추정액의 현재가치 = NPV
임

4. DCF의 계산공식 요약

$$\text{DCF (NPV)} = \frac{\text{1년내 현금흐름}}{(1 + \text{할인율})^1} + \frac{\text{2년내 현금}}{(1 + r)^2} + \frac{\text{3년내 현금}}{(1 + r)^3} + \frac{\text{4년내 현금}}{(1 + r)^4} + \frac{\text{5년내 현금}}{(1 + r)^5} + \frac{\text{잔존현금 총액}}{(1 + r)^5}$$

윤리경영 앞서 투명경영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양두구육(羊頭狗肉). 양머리에 개고기라는 뜻으로 겉과 속이 다른 속임수를 꼬집는 말이다.

중국 춘추시대 제(齊)나라 영공(靈公)은 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궁인들 중 예쁘게 생긴 여자들을 뽑아 남장을 시키고는 그 모습을 즐기곤 했다. ‘우리 임금의 남장한 미인을 좋아한다.’ 이 소문이 널리 퍼지자 반반한 여자들은 임금의 눈에 띄까해서 모두 남장을 했다. 그래서 영공은 대궐 밖 백성으로서 여인이 남장하는 것은 금한다고 포고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 금지령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영공은 재상인 안영(晏嬰)을 불러 까닭을 물었다. 안영이 대답했다. “전하께서는 궐내 여인들에게는 남장을 시키시면서 궐 밖 여인들의 남장은 금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양두구육’과 같은 속임수입니다. 궐 밖 여인들의 남장을 금하시려면 먼저 궐내 여인들의 남장부터 못하게 하십시오.”

최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가치 중 윤리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키워드로 부상했다. 미국 드폴(DePaul)대학이 300개 대기업의 윤리경영과 경영성과 관계를 비교 분석했다. 윤리경영체제를 갖춘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2배 이상의 주주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간판급 기업들도 잇따라 윤리경영을 경영 목표로 정하면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S그룹도 MS(Management System) 성립과정에서 이미 회사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거쳐 윤리경영관련 내용들을 공유해 왔다. 관계사별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규범과 서약서 등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H그룹도 최근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공개 입찰과 전자 입찰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다. 그래서 전 임직원들의 금품이나 향음 수수행위를 금하고 있다. S유통그룹은 윤리경영 준수 여부를 임원 승진의 최우선 조건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물론 임직원들이 깨끗해야 한다. 그래서 부정 없는 원료 구매나 상품기획이 이루어져야 경쟁력이 강화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은 회사 차원의 깨끗함이 긴요하다. 바로 투명경영을 통한 열린 경

영이다. 회사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로 뭇 돈 불리고 분식회계 그리고 자산과 경영의 부당한 세습을 자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윤리 경영은 공염불이 되기 쉽다.

투명경영이 기반 되어야 민주경영도 가능하다. 그런 후 접대비가 줄어드는 건전경영, 인사와 협력 회사 선정과 운영에서 공정경영이 가능해진다. 또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경제적 성과 외에 이웃을 위한 자발적 공헌을 통한 사회적 성과도 멋지게 해낼 수 있다.

2002년 회계 부정사건으로 신뢰를 잃은 미국의 엔론(Enron)과 월드컴(Worldcom)은 파산했다. 그러한 타락은 암담한 자본주의의 실상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부랴부랴 회계분식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골자로 한 법제정과 회계 감사인에 대한 규제시스템 강화에 골몰하고 있다.

2조원 이상의 자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100억원 정도의 세금만 물고도 합법이라고 우기는 한국 최대기업그룹도 있다. 이 판에 윤리경영은 양두구육일 뿐이다.

회사가 먼저 진짜로 변해야 한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9일 (금)	12월 12일 (월)	12월 13일 (화)	12월 14일 (수)	12월 15일 (목)
미	달 러 (USD)	1320.40	1306.60	1310.00	1304.40	1296.00
일	본 엔 (JPY)	966.30	955.75	952.35	963.05	956.74
영	국 파 운 드 (GBP)	1615.05	1600.45	1607.24	1614.00	1609.37
캐	나 다 달 러 (CAD)	971.60	957.39	960.90	963.05	956.46
홍	콩 달 러 (HKD)	169.58	167.85	168.52	167.77	166.74
중	국 원 (CNH)	189.55	188.07	187.67	187.12	186.12
유	로 화 (EUR)	1394.28	1375.59	1380.48	1387.36	1383.61
호	주 달 러 (AUD)	894.37	887.31	884.45	893.97	888.60
싱	가 폴 달 러 (SGD)	975.83	965.24	967.40	969.56	961.5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00.26	296.62	296.58	294.51	295.1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소모품 부가세 공제 여부

Q 당사는 현재 테스트 차량 관련 유지비 및 수선비 등을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차량관련 소모품 (가로바, 선바이저, 등등) 을 구매하여 차량에 부착 후 사용하려 하는데, 이 소모품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 테스트용 차량관련 소모품비도 테스트차량 유지비 및 수선비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영세율건과 일반매입건 혼재시 부가가치세 신고

Q 당사는 영세율 매출(로열티)과 일반 매출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할까요?

A 영세율매출이 있으면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하므로 다른 매출이 추가로 있어도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자재 인상 분 소급 적용 일괄 회수 처리시 부가세 문의

Q 최근 원자재 급등으로 인해 당사 해외 판매처에 판매단가를 현실화 하여 보상기로 협의를 하고 과거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단가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PO(2022.08월)를 받았고 이에 대한 인보이스도(2022.08월)에 발행이 되어 2022.10월초에 수금이 될 것이라는 확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당사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인보이스 발행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될런지 여부입니다.

A 수출금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증감사유가 확정되어 인보이스가 발급된 시점이 속한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귀사의 의견대로 인보이스 발행일 기준으로 적용 하시면 됩니다.

회원권 평가 시 시세반영 여부

Q 콘도 회원권의 무형자산 평가 시 회원권거래소 2곳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래소 2곳의 시세가 각각 다를 경우 평가에 적용하는 시세는 2곳의 평균값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높은 시세를 적용하도 무방한가요?

A 어떤 목적으로 자산을 평가한다는 것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는데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시가로 거래하도록 규정하면서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종부세

Q 지방제조법인이고, 장부가기준으로 공장 토지/건물이 150억, 기숙사 금액이 2억정도 되는데, 한번도 종부세 납부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종부세 합산배제 안내문이 왔는데 저희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므로,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A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은 합산배제가 되는데 귀사도 기숙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청을 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사재산이 종부세 대상인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합산배제신청과 관련하여서도 관할 세무서에 세부적인 내용을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관련 주요 내용

상담실 백종훈 차장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항목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따라서 관련 세법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신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지 등의 사실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나가거나 사실과 다른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보다 완벽한 연말정산을 위해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놓치기 쉽거나 틀리기 쉬운 공제항목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연도 중에 결혼하고 12월31일 이전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도 한쪽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고 100만원 이하가 되면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4. 부모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도 적용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

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5.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는지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6.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7. 처남 및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처남이나 처제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의 공제방법

대학에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수시모집 합격에 따라 올해 납부를 한 금액이라도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9. 초등학생 자녀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한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1.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없다.

12.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

13.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지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공제 가능하며,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시, 대기업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변화

과표구간	법인세율		비고
	현행	개정안	
2억원 이하	10%	20%	10%p 상승
2억원~200억원	20%	20%	동일
200억원~3천억원	22%	22%	
3천억원 초과	25%	22%	3%p 하락



금융투자소득세 · 증권거래세 개편 방안

	2010년 합의안	정부안	민주당 중재안
금융투자세	2023년 시행	도입 2년 유예해 2025년 시행	도입 2년 유예해 2025년 시행
증권거래세	현재 0.23%에서 2023년부터 0.15%로 인하	2023년 0.2%, 2005년 0.15%로 단계적 인하	2023년부터 0.15% 즉각 인하
대주주 기준	-	100억원으로 상향	100억원 상향 철회



카드사별 국세 · 지방세 납부 혜택 이벤트

구분	국세	지방세
BC카드	5만원 이상 결제 시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삼성카드	링크후 납부금액대별 결제일 할인혜택 제공	-
신한카드	-	체크카드 납부시 0.17% 캐시백
우리카드	신용 · 체크카드로 국세업종 합산 100만원 이상 이용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제공	-
하나카드	2~7개월 무이자 제공, 장기할부 부분무이자 제공	
KB국민카드	-	체크카드 12월말까지 응모 후 지방세 결제 시 납부금액의 0.2%포인트리 적립
NH농협카드	국세, 지방세 5만원 이상 결제 시(부분) 무이자할부 제공, 국세의 경우 납부수수료 포함	



총급여별 연금저축 ·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액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5500만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5500만원 초과	40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300만원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16.5%(115.5만원내)	
	5500만원 초과	13.2%(92.4만원)	



성공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12가지 특징

1.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강점을 살리는 데 치중한다.
2. 문제를 빨리 인식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3. 장기적인 만족을 위해 단기적인 만족감을 지연시킨다.
4. 외부적인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일 자체를 높이처럼 즐긴다.
5.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태도와 행동을 적절히 조절한다.
6. 끝마무리가 깔끔하며 피드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7.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8. 일을 미루지 않으며 과감한 실천력을 갖고 있다.
9. 무엇을 배우든지 생산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강구한다.
10.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11. 호기심이 많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한다.
12. 분석적, 창조적, 실천적 능력을 조화롭게 활용한다.

최 신 판 례 예 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정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 ④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재산-6393, 2022.05.25

질 의

- 1.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1+1)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후 1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되어 비과세되는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개(1개의 주택이 「도정법」 제76조제1항제7호라 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를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톤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338, 2022.03.28

질 의

- 질의법인은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해운기업으로 2021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 한편, 질의법인은 2020 사업연도에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계상된 외화환산이익 관련 △유보(**.*억원) 및 외화환산손실 관련 유보(*.*억원)가 있으며
 - 동 외화환산손익 관련 유보금액에는 해운소득 부문과 비해운소득 부문에서 발생한 금액이 합산되어 계상됨
 - * 질의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등 평가방법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외화자산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질의

- 톤세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익 관련 유보금액의 세무처리방법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법 같은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은 임대무기간의 종료일에 소득령§167의3①(2)마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사전법규재산-39, 2022.04.08

질 의

-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말소 이후에도 임대료 증액 상한(5%)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국내업체로부터 광고영상물을 공급받아
외국광고주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공급시
영세율 적용대상임

사업자가 외국광고주와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광고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를 통해 광고물을 제작받아 광고영상물을 공급함에 있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3705, 2022.05.25

■ 질 의

-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광고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예인의 국내소속사를 통해 광고물을 제작받아 외국법인에 광고영상을 공급할 예정으로
- (질의1)질의법인이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광고물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 (질의2)연예인 소속사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광고영상물 제작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 회 신

사업자가 외국광고주와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광고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의 소속사(이하 "A사")를 통해 광고영상물을 제작받아 외국광고주에게 공급함에 있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반출·반입한 후 인도·인수하는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건 광고영상물이 전자적 무체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고액채납자 6940명 명단공개… 채납세금 4조4천억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5일 신규 공개 고액·상습채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대상은 1년간 2억 이상 채납한 경우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이며, 총 채납액은 4조4196억원이다.

개인의 최고 채납액은 기타 캠블링 및 베테업을 하는 임태규 씨(50세)로 1739억원을 채납했으며, 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는 236억원을 채납해 법인 중 채납액이 가장 많았다.

올해 신규공개 인원은 지난해보다 76명이 줄었고, 100억 원 이상 고액채납자가 줄면서 채납액도 지난해보다 9416억원 줄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개는 종교단체가 23개(74%)이며,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다.

이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에 달했다.

이밖에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천만 원 이상 추징 당한 단체 4개, 기부금을 받고도 공익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단체 3개도 명단공개됐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관세청, 수출용원재료 관세 환급 신청 기한 '2년→5년으로 연장'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신청 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14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고시는 관련 특례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로, 과다 환급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선박용품 등의 적재 절차에 관한 준용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고시 인용조문을 명확히 했다.

관세청은 내달 3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심의를 거친 뒤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13일부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평균 44만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오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5만 가구로, 지급액은 502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은 3만 가구, 지급액은 69억원 늘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으로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4.8%,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4%로 가장 비중이 컸다.

국세청은 이날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로도 통지한다.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입금계좌를 써넣은 가구는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물을 통해 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갖추어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국세청, 2022. 12

-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¹⁾로 '21년 발급 금액²⁾이 142.0조 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의무발행업종(개) : ('10년) 32 → ('21년) 87 → ('22년) 95 → ('23년) 112

2) 발급금액(조 원) : ('05년) 18.6 → ('10년) 76.0 → ('21년) 142.0 → ('22년 11월 말) 140.9(잠정)

-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3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아래의 소비자상대업종(17개, 약 49만 명)을 알려드립니다.

① 가전제품 수리업 ②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 행정사업 ⑨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⑩ 여자용 겹옷 제조업 ⑪ 남자용 겹옷 제조업 ⑫ 구두류 제조업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 숙박공유업 ⑯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⑰ 기타 통신판매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은 성실납세의 출발이고 근간이 되는 만큼 사업자의 성실발급을 당부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0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금액 이상*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 ('10년) 건당 30만 원 → ('14년 7월 이후) 건당 10만 원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23. 1. 1.부터 아래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으로서 '23년에 추가되는 17개 업종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업 종 명	업종 정의(국세청 업종코드)
가전제품 수리업	·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4)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5)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61, 523363)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¹⁾	·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유리 및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32)

1) 거울 및 액자·주방용유리제품·관상용 어항 소매업(523422)은 '16. 7. 1.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

업종명	업종정의(국세청 업종코드)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 또는 보트용 기타 운송장비용의 각종 액체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05001)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오락용 게임용구 및 장비와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940)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중고의 가정용 영상 기기, 음향 기기, 통신 기기,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24092)
행정사업	·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및 법적 규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741109)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부품판매업에 한정)	· 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 전동자전거에 대한 부품 및 구성품을 소매하는 활동(504002)
여자용 겹옷 제조업	·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겹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81105, 181206)
남자용 겹옷 제조업	·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겹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81101, 181205)
구두류 제조업	·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제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192001)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시계,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9)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각종 가정용 가죽, 가방,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8)
숙박 공유업	· 일반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산업활동(551007)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²⁾	·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 및 해외직구대행업(525103, 525105)
기타 통신 판매업 ²⁾	·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5102)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



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

- (사례❶)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 (사례❷)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사례❸) 거래대금 20만 원 중 15만 원을 신용카드로,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 * 포상금 지급 한도 :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5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 현금영수증은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 ('05년) 18.6 → ('20년) 123.0 → ('21년) 142.0 → ('22년 11월 말) 140.9(잠정)
-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오니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연혁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발급 의무 시작일	구분	업 종
2010. 4. 1.	32개 업종 신규 지정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2010. 7.1.	4개 업종 추가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2014. 1.1.	12개 업종 추가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사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2015. 6.2.	4개 업종 추가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2016. 7.1.	6개 업종 추가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거울 및 액자·주방용 유리제품·관상용 어항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2017. 7.1.	6개 업종 추가	·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2019. 1.1.	5개 업종 추가	·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020. 1.1.	8개 업종 추가	·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2021. 1.1.	10개 업종 추가	·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2022. 1.1.	8개 업종 추가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2023. 1.1.	17개 업종 추가	·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 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소매에 한정), 여자용 겔옷 제조업, 남자용 겔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 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기타 통신 판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붙임 2 -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 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 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발급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 거부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 (2회 이상 위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10만 원 이상)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기타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가맹 시 • (미가맹 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 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붙임 3 - 자주 묻는 질문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2> 상품권을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의 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3>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문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이 되나요?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국세청 지정 전화번호 010-000-1234)하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자진 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13일 지급

- 국세청, 2022. 12

-
- (지급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오늘(12월 13일) 지급하였습니다.
 - (지급규모) 올해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게 5,021억 원을 지급하여 지난해* 대비 3만 가구, 69억 원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입니다.
 - * ('21년 귀속 상반기분 지급규모) 112만 가구, 4,952억 원
 -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4.8%,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심사결과)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로 통지하므로 우편물 수령 지연·분실 없이 지급 결과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 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령방법) 입금계좌를 신청한 가구는 오늘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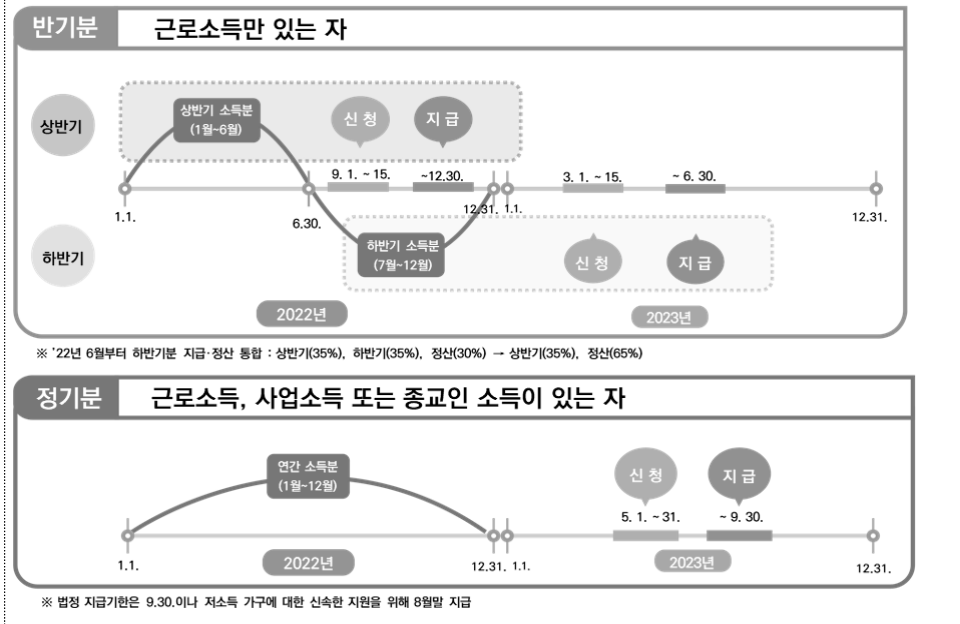
I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1. 지급 일정 및 규모

● 지급 일정

-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오늘(12월 13일) 일괄 지급합니다.
- 심사대상 127만 가구 중 10만 가구는 소득요건¹⁾ 또는 재산요건²⁾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내년 6월에 반기분 정산 심사 후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1)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홀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 2)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또한,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 정기분 심사대상이 된 2만 가구는 내년 8월에 정기분 심사 후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반기분과 정기분의 업무흐름도 |



● 지급 규모

- ('22년 귀속 상반기분) 이번에 지급하는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전년 대비 3만

가구, 69억 원 증가한 115만 가구 5,021억 원입니다.
- 또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입니다

(만 가구, 억 원)

귀속	신청		지급		지급 제외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2년	127	5,459	115	5,021	12*	438
'21년	121	5,300	112	4,952	9	348
증감	6	159	3	69	3	90

* (소득·재산요건 미충족) 10만 가구, (정기분 심사대상) 2만 가구

2. 유형별 지급 현황

- (가구 유형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가 71만 가구(6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 가구는 40만 가구(34.8%),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5%) 순입니다.
 - 금액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 2,651억 원(52.8%), 홑벌이 가구 2,154억 원(42.9%), 맞벌이 가구 216억 원(4.3%) 순입니다.
- (근로 유형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일용근로 가구는 63만 가구(54.8%), 상용근로 가구는 52만 가구(45.2%)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1만 가구가 더 많습니다.
 -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일용근로 가구 2,671억 원(53.2%), 상용근로 가구 2,350억 원(46.8%) 순입니다.
- (연령대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이 51만 가구(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 이하가 26만 가구(22.6%)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금액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2,236억 원), 20대 이하(995억 원), 50대(825억 원), 40대(591억 원), 30대(374억 원) 순입니다.
- (지급액 규모별)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43만 가구, 37.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만 원 미만(33만 가구, 28.7%), 50만 원 이상~70만 원 미만(26만 가구, 22.6%) 순입니다.



3. '22년도 세법 개정(안)

- '06년 장려세제 도입 이후 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23년 6월 정산 시점에 추가 지급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관련 세법개정(안) |

(만 원)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150 → 165	260 → 285	300 → 330	70 → 80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 2.4억 원 미만			

II

심사결과 확인 및 장려금 수령 방법 안내

1. 결정통지서 모바일 통지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심사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합니다.
 - * (대상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장려금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결정통지서를 우편 발송함에 따라 수취인 부재 시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 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으나,
 - 모바일 결정통지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우편 발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장려금 수령 방법

-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12월 13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¹⁾'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²⁾할 수 있습니다.

- 1)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 홈택스(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
- 2)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3. 심사결과 확인 방법

- 심사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 자동 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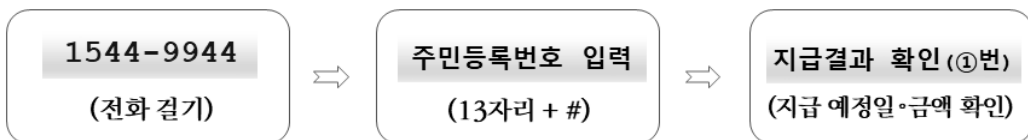
홈택스(www.hometax.go.kr)

- 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③반기 심사진행 조회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자동 응답 시스템 (☎ 1544-9944)



☞ 발신 번호가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와 일치할 경우에만 확인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장려금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전문상담요원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참고 1 -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통계

● 신청·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

신 청		지 급		지급 제외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100.0	100.0	90.6	92.0	9.4	8.0
127	5,459	115	5,021	12	438

●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

구 분	합 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가 구	100.0 115	61.7 71	34.8 40	3.5 4
금 액	100.0 5,021	52.8 2,651	42.9 2,154	4.3 216

● 근로 유형별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

구 분	합 계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가 구	100.0 115	54.8 63	45.2 52
금 액	100.0 5,021	53.2 2,671	46.8 2,350

● 연령대별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

구 분	합 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가 구	100.0 115	22.6 26	7.8 9	10.4 12	14.8 17	44.4 51
금 액	100.0 5,021	19.8 995	7.5 374	11.8 591	16.4 825	44.5 2,236

● 지급액 규모별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

구 분	합 계	30만 원 미만	50만 원 미만	70만 원 미만	90만 원 미만	120만 원 미만
가 구	100.0 115	28.7 33	37.4 43	22.6 26	5.2 6	6.1 7
금 액	100.0 5,021	14.8 741	34.1 1,713	27.8 1,397	10.1 506	13.2 664

참고 2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제도 취지	◇ 소득 발생시점('22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3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																				
신청 자격 (지급요건)	◇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근로장려금</th></tr><tr><th>단독 가구</th><th>홀벌이 가구</th><th>맞벌이 가구</th></tr><tr><td>총소득 기준금액 (부부합산)</td><td>2,200만 원</td><td>3,200만 원</td><td>3,800만 원</td></tr><tr><td>재산</td><td colspan="3">2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td></tr></table>	구 분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부부합산)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재산	2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구 분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부부합산)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재산	2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지급요건 판단기준일	◇ 반기신청 시: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반기신청 정산 시: 소득 발생연도 기준 '22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 <table><tr><th>구 분</th><th>상반기</th><th>하반기</th><th>정산</th></tr><tr><td>가구원</td><td>'21. 12. 31.</td><td>'21. 12. 31.</td><td>'22. 12. 31.</td></tr><tr><td>소 득</td><td>'21년 연간 총소득¹⁾</td><td>'21년 연간 총소득</td><td>'22년 연간 총소득</td></tr><tr><td>재 산</td><td>'21. 6. 1.</td><td>'21. 6. 1.</td><td>'22. 6. 1.</td></tr><tr><td>총급여액²⁾</td><td>'22년 추정소득</td><td>'22년 발생소득</td><td>'22년 발생소득</td></tr></table> 1) 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2)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정산	가구원	'21. 12. 31.	'21. 12. 31.	'22. 12. 31.	소 득	'21년 연간 총소득 ¹⁾	'21년 연간 총소득	'22년 연간 총소득	재 산	'21. 6. 1.	'21. 6. 1.	'22. 6. 1.	총급여액 ²⁾	'22년 추정소득	'22년 발생소득	'22년 발생소득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정산																		
가구원	'21. 12. 31.	'21. 12. 31.	'22. 12. 31.																		
소 득	'21년 연간 총소득 ¹⁾	'21년 연간 총소득	'22년 연간 총소득																		
재 산	'21. 6. 1.	'21. 6. 1.	'22. 6. 1.																		
총급여액 ²⁾	'22년 추정소득	'22년 발생소득	'22년 발생소득																		



신청 및 지급	◇ 반기분 신청 및 지급			
	구분	상반기	하반기	정산
	신청	당해연도 9.1. ~ 9.15.	다음연도 3.1.~3.15.	-
	지급	당해연도 12월 지급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 35%	다음연도 6월 지급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 시 추가지급, 과다지급 시 환수*	

*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참고 3 - 주요 문답 사례 (Q&A)

사례 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 '22년 1월 ~ 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2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1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고, '21. 6. 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다만, 아래의 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사례 2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요?

- (지급요건 미충족) 심사결과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자(배우자 포함) 중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내년 8월에 정기분 심사 후 지급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지급대상금액 15만원 미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8 제5항에 따라 올해 12월에 지급하지 않으며, 내년 6월에 정산 심사하여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연간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사례 3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 (계좌 신고 시)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계좌를 신고하였으면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 미신고 시)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수령 시)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 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여 받았는데 내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해야 하나요?

- 올해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내년 6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 심사하여 지급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 상반기분 신청자: 하반기분 자동 신청

사례 5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세청에서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①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 ② 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 내려받기하여 확인
 - ③ 자동 응답 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 ④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참고 4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요건 (부부 합산)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4,000만 원
	최대 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50 ~ 70만 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재산 요건 (가구 원합 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원1) 미만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일잔액, 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채권은 액면가액), 회원권·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1)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2) (주택) 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가구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 우 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 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단, 전문직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임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 기획재정부, 2022. 12

-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음('22.12.12~'22.12.19일)

[주요 내용]

- 최근 국제 거래 확대, 새로운 상품·사업의 등장 등에 따라 국가 간 과세문제가 복잡·다양화되고 있으며,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특히 디지털세 등 새로운 국제 조세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부합하게 새로운 국제 조세기준 설계 과정에 국익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
- 이러한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세제실 내 국제조세정책관을 신설하여 국제조세 분야 조세 제도의 기획·입안과 국제거래 관련 조세의 조정 기능을 총괄 수행할 계획임
 -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의 국제조세제도과 및 신국제조세규범과와 조세총괄정책관실에 있는 국제조세협력팀을 국제조세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하여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전담할 예정임



〈 개 정 안 (5정책관 15과) 〉



[기대 효과]

- ① (기능 효율화) 현재 2개의 정책관이 분산하여 운용 중인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국제조세정책관 산하로 통합·일원화하여 효율성 제고
 - 조세총괄정책관에서 수행 중인 조세조약 제·개정 업무와 소득법인세정책관에서 수행 중인 국제조세 기본법령 입안·운용 및 디지털세 등 국제 조세기준 마련 대응 업무를 국제조세정책관으로 이관하여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 운용
- ② (우리나라 국익 확보) 국제조세 관련 정책 역량은 국가경쟁력과 세수확보 등 국익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목소리 반영 가능
 - 국제조세 제도 입안·협상 프로세스 관련 고도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국제회의에서의 발언 영향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③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 개편 추진) 국제조세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 개편의 추진 동력이 강화
 - 금년 세제개편을 통해서 추진 중인 해외소득 면제 방식 도입 및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포함하여 국제조세 제도의 선진화 방안과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조세조약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향후 추진일정]

-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할 계획이며, 12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 향후 입법예고·부처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사항이 수정될 수 있음

외부감사인 선임 · 지정제도 및 지정감사 업무수행 관련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2022. 12

I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1 외부감사 대상회사

- ① 주권상장법인
- ② 상장예정법인(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
- ③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	
일정규모 이상	(2가지 이상 해당) ① 자산 120억원 이상 ② 부채 70억원 이상 ③ 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 종업원수 100명 이상	(3가지 이상 해당) ① 자산 120억원 이상 ② 부채 70억원 이상 ③ 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 종업원수 100명 이상 ⑤ 사원수 50명 이상

2 외부감사 면제회사

- ☐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 후 면제가능
- ① 사업연도 중 신설*된 법인(해당 사업연도에 상법 172조에 따라 설립등기)
 - * 사업연도 중 분할이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는 설립등기일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여부를 판단
 - ② 공기업 · 준정부기관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③ 자본시장법(제9조제18항제2호&3호)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유한회사, 투자목적회사(자본시



- 장법 제249조의1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 ④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회사(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경우 제외)
 - ⑤ 해산·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
 - ⑥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 ⑦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 연락두절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폐업회사로 인정 등

3 감사인 선임기한

-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선임(초도감사는 4개월 이내)
- 단,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참고]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 ① (상법)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법 §542의11.①, 영 §37.①)
- ②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다음 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 (법 §3.③.2, 16.①, 영 §6.③)
 - (제외 회사) ①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상장사는 2조원) 미만 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 ②자산 7천억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구 분	감사인 선임기한	2023년(선임기한)*
①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22.12.31.
②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23.5.1.
③ 이 외 외부감사 대상회사**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23.2.14. (‘23.5.1)

*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는 외감법(§11①2호)에 따라 감사인이 지정됨

** 법상 의무설치대상은 아니나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4 감사인 선임대상 사업연도

-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전기말 자산 1천억원↑) 및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그 외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참고]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 축소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라 대형비상장회사 기준을 상향조정

- ❶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 ❷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5조원 이상) 소속회사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 ❸ 이외 비상장주식회사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 변경 기준 적용 시점 추후 발표 예정

◆ 대형비상장사 적용 규제

- ① 감사인 자격을 회계법인으로 제한, ② 감사담당이사의 연속감사 가능기간 제한
- ③ 3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화, ④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등
- ⑤ 소유·경영 미분리의 주기적 지정 대상 포함

5 감사인 자격 제한

-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은 회계법인과 감사반으로 구분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감사가능(감사반 불가)
 -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 가능
 - ※ 사업연도 중에 상장하는 회사도 등록된 회계법인만 감사가 가능하므로 상장하는 사업연도에 미등록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에 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함에 유의

6 감사인 선임권자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선임

구 분	감사인 선정*
①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
②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

* 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

- 그외의 회사는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 중소형 비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상법 : 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 전기감사인 선임 이후 당기에 교체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을 그대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별도의 감사인 선임절차 불필요*)
-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더라도 3년에 1번씩 선임절차 필요

7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구성원수	· 반드시 5인 이상(5~6인)
구성원	· 감사 1명 · 사외이사 2명 이내 · 기관투자자 주주의 임직원 1명 · 일반 주주 1명 ·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 1명
외부전문가	· 대체 가능
약식위원회	· 구성원(5~6인) 전원 동의시 3인(위원장, 감사, 사외이사)으로 구성하고 전원(3인)출석, 전원 찬성으로 의결
참석	· 재적위원 2/3이상
승인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유의사항	· 사내이사 불가 · 이해관계자 한도 준수 · 위원장 호선(사외이사 중 호선, 사외이사 없는 경우 감사 제외한 위원중 호선, 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

8 감사인 선임·체결보고

- ☐ 감사인은 매년 감사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에 관련 서식에 따라 계약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시행령 §18④)
 - 지정감사 등 예외없이 매년 계약체결 후 보고 필요
- ☐ 회사의 경우 감사인 교체시에만 감사인 선임보고를 하되, 상장회사 등(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의무 회사)은 3년에 1번씩 선임보고 필요
 - ①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중소형 비상장사가 전기 감사인을 당기에 다시 선임한 경우 등은 보고의무 없음

감사인 선임보고 제출서류

- ① 선임보고 공문, ② 감사계약서 사본, ③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 ④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사록)
- ⑤ (감사인 변경 시)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참고〉회사의 감사인 선정기준 및 사후평가 제도

- (기준 및 절차) 감사*궐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하기 전에 미리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
 - * 감사인 선임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됨
 - ① 감사시간·인력·보수 및 계획의 적정성, ②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③ 전기감사인에 관한 사항(감사시간·인력·보수궐계획의 충실한 이행 등)
- (사후평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매년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외부감사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
 - *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감사는 상기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 차기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일괄 제출 가능
 - ※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정절차가 필요없지만, 준수사항 이행여부는 확인을 해야 함

II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1 지정제도의 개요 ①

- (지정제도)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며, 크게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으로 구분
 - (주기적 지정)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新외감법이 개정되어,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
 -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 *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원 또는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로서



- &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 &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1 지정제도의 개요 ②

- (직권지정)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
 - 新외감법 개정으로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재무상태 악화 및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을 직권지정대상으로 추가

구 분	직권지정 사유*
현행 유지	① 회사요청, ② 감사인 미선임, ③ 감사인 부당교체, ④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⑤ 감리결과 조치, ⑥ 관리종목 , ⑦ 상장예정법인, ⑧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 등)에 따른 지정요청, ⑨ 횡령·배임 발생 , 주채권은행 등의 지정요청,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등 외감법령을 위반한 경우(경미한 위반 제외)
신 설	① 재무제표 대리작성·회계자문 요구, ② 3년 연속 영업손실 or 負의 영업현금흐름 or 이자보상배율 1미만 , ③ 투자주의 환기종목(단,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는 제외), ④ 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⑤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⑥ 3년간 최대주주(2회↑) or 대표이사(3회↑) 변경 , ⑦ 지정기 초자료 제출의무 위반

* 볼드체는 주권상장법인에만 해당하는 지정사유

2 지정시기

-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 째 되는 달의 초일*(‘ 22.9.1.)을 기준으로 주기적 지정 및 상장회사 등의 직권지정 대상회사를 선정

* 지정대상선정일 : 지정대상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외감규정 §12조⑧)

- 10월 14일*(본통지 4주전) 경에 회사와 감사인에게 지정 예정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재지정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11월 11일*경에 본통지(지정통지)

* 사전통지 및 본지정 결과가 확정되는 날이며, 등기 발송 등으로 2~3일후에 지정통지 수령 가능



3 지정기간

- (주기적 지정) 주권상장법인 등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되는 회사는 금감원으로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게 됨
- (직권지정) 지정대상회사별로 지정기간이 1 ~ 3개 사업연도로 달리 적용
 - (주기적 지정대상회사*) 3개 사업연도
 -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주기적 지정대상회사 外) 1개 사업연도(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법규위반 사유로 지정받은 회사가 당해연도에 동일한 법규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지정받는 경우: 2개 사업연도)

[참고] 주기적 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추가 발생시

◇ ‘21~’23년까지 주기적 지정을 받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A가 ‘23년에 직권지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 상장사 A는 주기적 지정대상이므로, ‘23년에 직권지정 사유해당시 ‘25년까지 3년간 지정받아야 하므로
 주기적 지정 기간(‘21~’23년)과 합하여 ‘21~’25년까지 5년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됨

4 재지정요청

- (개요) 재지정요청은 통지받은 회사와 회계법인이 독립성 훼손사유 등 법령상 정해진 재지정 사유에 해당시, 금감원에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주요 감사인 재지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지정통지 후 2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비용분담을 요구하여



징계(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받은 경우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최초 회사가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속한 지정군보다 상위, 동일군 또는 하위 지정군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단, 하향은 주기적지정, 상장애정, 회사요청만 가능)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 모두 지정감사이고,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가 법원이 선임허가한 감사인으로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법령 등에 따라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요청방법) 재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나 감사인은 사전통지 후 2주 이내, 본통지 후 1주 이내에 금감원에 요청가능(전자방식)

5 지정감사 계약체결 및 보고

- (계약체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지정통지*(본통지)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
- * 감사인지정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와 감사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본통지 이전에도 계약체결 가능
- 다만 보수협의를 난항을 겪어 기한내에 체결하기 어렵거나 계약 전에 독립성이슈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 운영
 - * 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기한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한 경우
- (체결보고) 자유선임과 달리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금감원에 선임내역을 보고(감사인 선임보고)할 필요가 없는 반면,
- 지정감사인은 자유수임시와 동일하게 금감원에 체결내역을 보고

6 지정방식 ①

- ✓ '22.9.29 개정된 외감규정에 따라 감사인 지정제도 및 방식이 변경
- ① (기업·감사인군 분류기준 개선) 지정군을 5개에서 4개로 조정하고 회사군 '가' 군 범위를 확대(5조이상 → 2조 이상), 감사인군은 분류기준을 강화*
- * 품질관리담당자 수 기준 상향, 손해배상능력을 보험금으로 변경 등
- ② (감사품질의 지정 연계) 회계사수 기반의 감사인 점수에 감사인감리 결과와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반영
- ③ (지정방법 개선) 동일군 내 재지정 도입 및 감사위험이 높은 직권지정사유(3년 연속 영업손

실, 관리종목, 감리조치 등)의 하향재지정 제한*

* 감사위험과 연관성이 낮은 주기적지정, 상장예정, 회사요청 등은 하향재지정제 유지

- ④ (일반 회계법인 우선 지정) 일반 회계법인(미등록 감사인)이 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지정신청할 경우 비상장사 2사를 우선 지정(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게 1개사 추가 지정)

- ⑤ (시행시기) 품질관리인력요건*(감사인군 분류기준)과 감사인감리 결과반영** 등 유예사항을 제외한 개선내용은 금융위 의결('22.9.28.) 후 즉시 시행

* '나'군의 140% 이상과 '다'군의 120%이상 요건을 6개월 유예

** 규정개정 이후 감사인감리 결과 증선위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반영

6 지정방식 ②

- (감사인 미선임 이외 지정사유)

- 1단계 : 감사인(회계법인)이 특정*된 경우는 자산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지정

* 동일 감사인 연속지정, 특정감사인 (재)지정요청(법원허가, 연결일치, 외자도입조건 등)

- 2단계 : 그 외 회사를 감사인(회계법인)별 지정점수*대로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별도)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

$$* \text{감사인 지정점수} = \frac{\text{감사인 점수}}{1 + \frac{\text{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2\text{조원} \uparrow 3\text{배}, 5\text{천억} \sim 2\text{조원 } 2\text{배 가중치 부여})}$$

- (감사인 미선임 사유 지정) 등록회계법인에게 연간 지정 회사수에 따라 비례배분

$$* \text{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 점수} = \frac{\text{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 점수}}{1 + \text{감사인으로 지정받은 미선임회사 수}} \times 100$$

6 지정방식 ③

- (지정군) 회사의 전기말 자산(별도)규모에 따라 2조원 이상은 '가' 군(群), 5천억원 ~ 2조원은 '나' 군, 1천억 ~ 5천억원은 '다' 군 등 4개(가~라)의 군으로 구분

- 감사인은 공인회계사수, 감사업무 매출액 등 분류기준에 따라 4개 군(群)으로 구분하여, 회사가 속한 군(群)보다 감사인의 군(群)이 낮아지지 않도록 배정

- (감사인 등록제) 주권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할 경우, 법 9조의2①에 따라 등록된 감사인에게만 배정



- (일반회계법인 특례) 자산 5천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감사품질 역량을 갖춘 일반회계법인(미등록)에 2개사 우선 지정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금융회사, 감사인 미선임회사 제외

- 이중 품질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회계법인은 1개사 추가 우선 지정

6 지정방식 ④

- (기타) 회사가 전기에 자유선임했던 감사인은 당기 감사인 지정시 배제*

*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선임시(자유선임) 전기 지정감사인을 배제해야 함(외감법 §11조⑥)

- 연속하는 2개 이상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 회사는 지정사유가 동일한 경우, 전기에 지정받은 감사인을 당기에도 우선적으로 배정(3개 사업연도恨)
- 동일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사업연도 동안 직권지정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 이미 지정받은 감사인의 지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음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기준

1 도입배경

- 지정감사 비중이 증가하면서 감사 보수·시간·서비스품질 등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간 분쟁이 해마다 증가

〈 지정감사 업무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 예시〉

- 자유선임시 활발히 진행되던 감사인과 회사간 외부감사 계약내용에 대한 협상·조정이 지정감사시 원활하지 못함
- 감사투입시간, 감사보수 등에 대한 협의나 근거 자료 제시 요구에 미온적
- 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3의 외부기관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회사에 과도한 업무를 요구
- 기업이 직접 평가하거나 외부용역을 의뢰하여 추정한 공정가치를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설명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표명

- ➡ 그동안의 감독지침·가이드라인·감사보수 관련사항을 총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기준」을 마련하고 '21.11.18.부터 시행

2 감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4)

- ☐ 지정감사인은 감사계약조건을 마련하고 근거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시하는 등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 (감사인력) 회사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적격성과 역량을 갖춘 구성원을 우선적으로배정하고 감사업무 수행 중 주요 구성원이 변경되지 않도록 노력
 - 회사의 내부감사기구가 업무팀의 구성 및 구성원의 전문성 등 자격요건에 대한 조정·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
- ☐ (감사투입시간) 표준감사시간을 활용하여 감사투입시간을 산정하되 문서를 회사에 제시하고,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회사에 감사투입시간을 제시하여서는 안됨
 - 문서화 내용 : ①표준감사시간 산정결과 및 근거, ②표준감사시간을 기초로 회사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종 감사예정투입시간을 산정한 조정결과 및 근거
- ☐ (감사보수) 감사보수는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결과 등을 함께 제시

3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5, §7)

- ☐ (회계추정 관련 검토 시) 회사가 KIFRS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결론을 내렸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거나 회사가 제시한 회계처리 결론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여서는 안됨
- ☐ (감사증거 요청) 회사에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 (위반사항 지적)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 (공정가치 평가) 추정치를 확정할 수 없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회사의 평가방법 및 근거자료의 객관성·중립성·일관성, 외부용역의 전문성·독립성 등 그 판단결과를 존중
- ☐ (제시자료 요구) 회사 제시 자료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면 안됨
 1. 특정의 추정치 또는 평가방법을 적용
 2. 특정한 사안(공정가치 평가 등)에 대한 외부용역 의뢰를 요구



3. 특정한 기관(회계법인 등)에 한한 외부용역 의뢰를 요구
4. 디지털포렌식 감사를 요구

4 전·당기감사인 의견 불일치(§9)

- (전기 재무제표 수정 필요 시) 해당 사실을 회사와 전기감사인에게 통보하고 회사·전기감사인·당기감사인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함
 - 협의 후에도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다음 조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을 고려하여야 함
 1.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
 2. 회사에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조정협의회」에 의견조율을 요청하도록 권고

5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관련(§6)

- 회사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는 행위* 등은 외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재무제표 작성 등)에 해당하지 않음
 - * 회계기준 위반 판단이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인이 특정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행위는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6 신고센터 신고범위 확대

- 기존 감사보수뿐 아니라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부당행위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접수하고, 금감원·한공회가 신속히 조정궐처리할 예정
 - * 예) 감사계획·인력·보수·시간 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자료 요구 또는 제3자 검증 요구 등
 -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한공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제외접수 및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
 - * 향후 외감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지정제외접수 및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예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 2022. 12

정부는 12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소관(044-202-7350)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고, 짧은 계약기간,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의 특성이 있는데도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에 따라 상당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지원에서 배제되었다.

* 저소득(월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 적용 지원을 위해 근로자·사업주 등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최대 80%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

이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23년에는 더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현재)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

(개정)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고용보험료 +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2>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 규정

☞ 전국민고용보험확대TF팀 소관(044-202-7925)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고용보험 신고, 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 의무 등이 부여되어 보험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고용보험사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

* '22. 6. 10.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3. 1. 1. 시행 예정)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을 위해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 요건으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등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3>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한 기간 차등 설정

☞ 고용보험기획과 소관(044-202-7359)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하더라도 자진폐지 또는 인가취소* 이후에 기간의 제한없이 인가 기준만 충족하면 재인가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인가 취소되거나, 인가취소 등 회피목적으로 취소 처분 전 폐지신고를 한 경우 등

이에 자진폐지·인가취소 후 재인가 제한기간을 사유별로 차등 설정(1년의 범위 내)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었다.

* '22. 6. 10.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3. 1. 1. 시행 예정)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행기관이 자진폐지신고를 한 경우 3개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간 재인가를 제한하는 등 그 사유별로 인가에 제한을 받는다.